

# 자사고 24곳 중 11곳 일반고 전환… 중3 혼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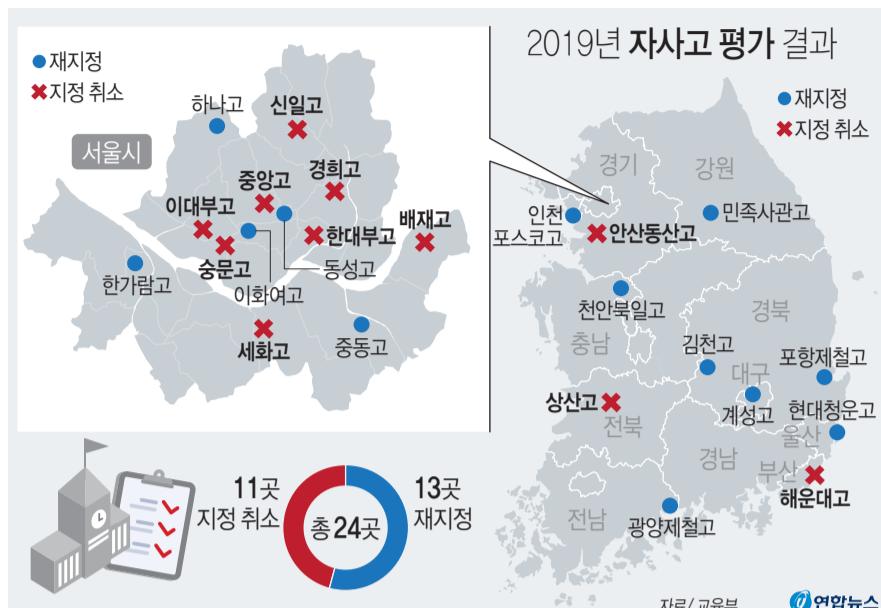
## 자사고 폐지 후폭풍

상산고·해운대고·서울 8개교  
교육부 동의거쳐 내년 최종 확정

서울시교육청 “공정하게 평가”  
자사고·학부모·교원단체 등 ‘반발’  
교육시민단체 ‘환영’… 논란 확산

서울자율형사립고(자사고)8곳이 대거 지정취소 위기를 맞는 등 올해 시도 교육청의 재지정평가를 받은 자사고 24교 중 절반에 달하는 11곳이 교육부 동의를 거쳐 내년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행정소송을 예고해 당장 내년 신입생 선발을 앞둔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주범이라는 교육당국의 판단과 수월성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교육계 논란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서울 자사고 13교 중 8교는 기준점수(70점)에 미달했다. 앞서 평가대상 자사고 13교는 지난 4월 5일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고, 교육청은 외부 현장 교육전문가 2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 서류에 대한 서면평가(~5월 6일), 학생·학부모·교원·온라인 만족도 조사(4월 22일~5월 1일), 현장평



가(5월 7일~6월 3일)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전주 상산고,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와 서울 8개 자사고 등 올해 평가를 받은 24교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1교가 일반고 전환 위기에 놓임에 따라 해당 학교가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청문절차를 거쳐 교육부가 동의하는 절차를 앞둔 가운데, 현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만큼 교육부 동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 결과가 나오자 “청문 절차 완료 후 지정취소에 대해 동의를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 평가 내용과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 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상당수 자사고가 입시 교육에 집중하면서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고교 교육 모델을 만들자는 당초 자사고 서립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우수 학생을 선점해 입시 교육과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낸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평가 지표 관련 부당성 논란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자사고 요청사항 등을 평가 매뉴얼에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면서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학생전출 및 중도이탈비율’의 경우 전 가족의 타시도 이전이나 해외 유학, 운동부 진로 변경 등 타당한 이유로

인한 전출이나 중도이탈 수는 통계에서 제외했고, ‘교원 1인당 학생수 비율’에는 정원 외로 채용한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포함했다.

자사고와 학부모, 교원단체 등은 이러한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발하고 있고, 일부 교육시민단체는 자사고 폐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교육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문절차 중인 상산고와 해운대고 등은 교육부 동의 여부에 따라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다. 상산고의 경우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80점)가 타 시도와 비교해 10점 높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도 앞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을 밝혔다. 김철경 회장은 “평가 결과 발표 후 우리의 입장이 더 강경해졌다”면서 “구체적인 평가 결과가 통보되면 면밀히 살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도 한 학교라도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공동 대응하기로 한 바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자사고 존폐를 반복해선 안된다”며 자사고 폐지 정책을 비판하고 “자사고 등 고교체제는 국가적 겹토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일이며,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년 운영을 평가한다

면서 평가 직전인 지난해 말에야 바뀐 재지정 기준점, 평가지표, 배점 등을 통보해 불공정하고, 유독 기준점을 80점으로 높인 전북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회통합전형 의무가 있는 구자립형사립고 전환 자사고를 감점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최종 재지정 취소 여부를 놓고 학교-교육청-교육부 간 소송까지 예고돼 있어 앞으로 학교,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는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교 서열화와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자사고 폐지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이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면 강남과 서초, 양천 등 교육특구에 자사고가 집중 배치되는 등 지역간은 물론, 일반고 내에서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의 경우 기준의 학교 운영 노하우에 따라 지역내에서 입시 명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우수 일반고와 우수 자사고가 강남, 서초, 양천구에 집중 배치돼 교육특구로서의 지위가 더욱 공고화되고 이 지역에 대한 선호현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반대로 자사고가 없어지는 비교 교육특구 학부모들의 불안감 증가와 노원구 등 인근 교육특구로의 쟁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넥슨·넷마블 등 게임사 채용문 ‘활짝’

### 펄어비스 등 하반기 채용 스타트

넥슨, 넷마블, 컴투스 등 주요 게임기업이 하반기 채용을 진행한다.

9일 잡코리아와 게임잡에 따르면, 넥슨·펄어비스·넷마블·컴투스·크래프톤·스마일게이트·라인플러스·네오플 등이 채용을 진행 중이다.

넥슨은 경영지원, 게임사업, 게임아트,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기획, 앤지니어, 해외사업 등 각 직군별 신입과 경력 사원을 모집한다. 자격요건과 우대사항은 모집 직군별 상이하다.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후 직군/직무 분야에 따른

과제심사,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세부 모집 직군과 마감일 입사지원은 넥슨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넷마블은 웹 서비스 개발자, 회계 담당자, 게임 영상 디자이너, UI 디자이너, 보안 직군 등 각 부문에서 채용에 나선다. 신입의 경우 서류전형, 넷마블 테스트, 심층면접 순으로 진행되고, 경력직은 서류전형 후 실무면접, 인성검사, 임원면접을 진행한다. 자격요건과 우대사항 등 세부 사항은 모집 부문별 상이하므로 넷마블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 교육부 사립대 종합감사 첫 타자는 연세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사립대학 감사’ 등 신뢰회복 추진 조치에 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관 감사경력자 3명, 교수 1명이 선정됐다.

연세대 대상 종합감사 이후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6000명 이상 규모 16개 대학에 대한 감사도 2021년까지 계속 이어진다. 개교 이후 종합감사 미수감 사립대는 111교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5월 13일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 후속 조치로 15개 대학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전북대 A교수 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끼워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조사 결과, 전북대는 앞서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교수의 자진 신고만 받아 ‘미성년 공저자 논문 0건’으로 3차례 허위 보고했다. 또 두 명의 교수는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 사실을, 나머지 8명의 교수는 미성년자 공저자 등재 사실이 숨긴 것으로 드러나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 9건, 미성년 공저자 논문 16건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수의 경우 5건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 2명을 공저자로 등재 했고, 자녀 1명이 대학에 진학한 후 3건의 논문에 추가로 공저자로 올렸다. 또 해당 논문을 허위로 한국연구재단·농촌 진흥청 지원으로 표기, 성과로 보고해 논문 등재 인센티브로 490만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전북대의 부실한 행정 조사와 입시 관리 체계의 문제를 심각하다고 판단, 전북대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A 교수를 포함해 23명의 교직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부정 입학이 확인된 A 교수 두 자녀의 전북대 입학 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과 수사 의뢰를 했다.

/한용수 기자

## 교육부 “현직 교사도 ‘유튜버’ 될 수 있어”

###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구독자 천명 넘으면 겸직허가 ‘필수’

유튜버로 활동하는 교사들이 늘면서 광고수익 취득이나 겸직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교원의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연간 올리는 영상의 총 재생시간이 4000시간이 넘으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 유튜브 활용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유튜브 활동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9년 4월 1일 현재 교원 유튜버는 9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에 이르면,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도 달하지 않으면 겸직하고 대상은 아니지만, 겸직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용수 기자

교육부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유튜브 활동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9년 4월 1일 현재 교원 유튜버는 9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에 이르면,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도 달하지 않으면 겸직하고 대상은 아니지만, 겸직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